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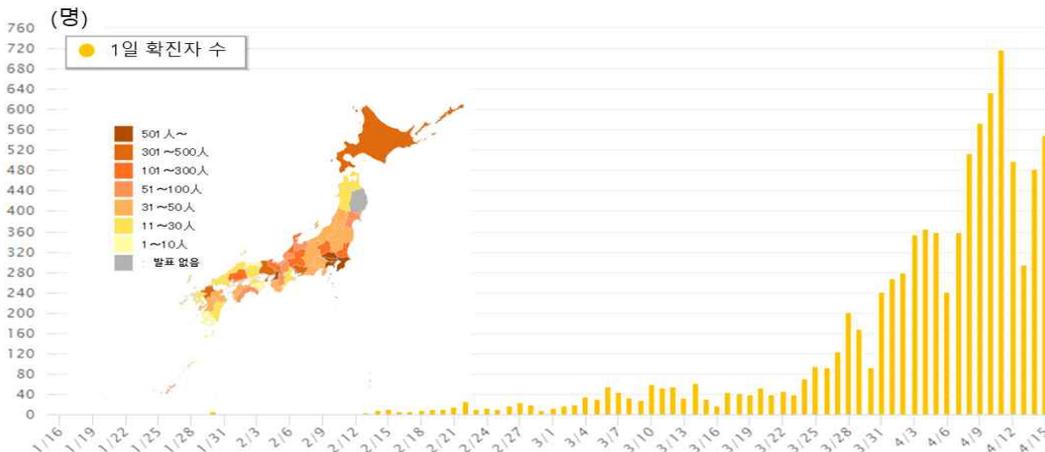
## [일본] 코로나19 관련 동향

2020. 4. 16

### 1. 확산 동향

- 일본은 2020년 1월 15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4월 16일(오전 10:30 기준) 까지 총 9,435명의 감염자와 192명의 사망자가 발생
  - 국내 감염자는 8,723명(사망 179명)이며, 그 중 우한발 전세기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14명,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승객·승무원 중 감염자는 712명(사망 13명)으로 집계
    - 4월 8일부터 4일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3월 11일에는 719명으로 급증
  - 지역별로는 도쿄도(2,446명), 오사카부(968명), 가나가와현(619명), 치바현(537명), 사이타마현(513명), 후쿠오카현(436명), 효고현(423명), 아이치현(358명), 홋카이도(313), 교토부(215)명 순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
    - 특히 도쿄도와 오사카부에서는 4월 8일부터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감염이 급증하고 있음.
  - 한편 NHK는 4월 14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전용병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9개에 달한다고 발표, '의료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sup>1)</sup>
    - 도쿄도(97%), 오사카부(120%), 효고현(103%), 후쿠오카현(89%), 야마나시현(104%), 시가현(83%), 교토부(104%), 고치현(95%), 오키나와현(97%)으로 집계<sup>2)</sup>

<그림 1>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4월 16일 오전 10:30)



주: 지역별 지도는 4월 16일, 1일 확진자 도표는 4월 15일 기준

자료: <https://www3.nhk.or.jp/news/special/coronavirus/data/>(검색일: 2020. 4. 16).

1) <https://www3.nhk.or.jp/news/special/coronavirus/medical/>(검색일: 2020. 4. 16).  
 2) 팔호 안은 입원중인 환자(입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 대비 코로나19 전용 병상의 비율을 뜻함. 100%를 초과하는 비율은 병상이 부족하여 자택, 숙박시설 등에서 요양·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있음을 뜻함.

## 2. 경제적 영향

- 4월 7일 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발동된 긴급사태선언으로 개인소비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sup>3)</sup>
  - 노무라종합연구소(NRI)는 긴급사태선언의 대상 지역이 엄격한 외출 자체 요청을 발표하는 경우 1개월 동안 개인소비가 6.8조 엔(GDP의 1.2%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sup>4)</sup>
  - 다이와종합연구소(大和総研)는 긴급사태선언 자체만으로 소비가 1개월에 1.4조 엔(그 중 도쿄도는 0.4조 엔)감소될 것으로 추정함.<sup>5)</sup>
    - 대상 지역에서 '외식·숙박'에 대한 지출이 평시 대비 90% 감소하고, '교통,' '오락·레저·문화'는 50% 감소할 것이라 전망
    - 코로나19가 개인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바이러스가 6월경 완화되는 단기 시나리오의 경우 총 7.6조 엔, 2020년 중 유행이 지속되는 장기 시나리오의 경우 총 14조 엔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그림 2> 참고)<sup>6)</sup>
    - \* 긴급사태선언의 대상지역인 도쿄,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의 경제규모는 일본 GDP의 47.5% 수준임.<sup>7)</sup>
  - 리소나종합연구소(りそな総合研究所)는 지역별로 간토(関東) 및 간사이(関西)는 관련 소비가 85%, 규슈·오키나와는 75%, 기타 지역은 7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sup>8)</sup>
    - 긴급사태선언에 따라 전국에서 개인소비의 4.9조 엔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1개월 동안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지역별 소비감소액이 지역총생산(GR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간사이 12.2%, 간토 11.2%, 규슈·오키나와 11.4%로 나타나 이번 선언으로 간사이 지역이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였음.

3) 긴급사태선언은 5월 6일까지 약 1개월 간 효력이 지속되며, 감염 확산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음.

4) NRI Journal(2020. 4. 8), 「木内登英の経済の潮流—「緊急事態宣言と緊急経済対策」」.

5) 이는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감소액에 해당하며, 긴급사태선언의 영향 및 경제활동 감소 등에 따른 전체 소비 감소는 <그림 2>를 참고. 大和総研グループ(2020. 4. 8), 「緊急事態宣言・緊急経済対策後の日本経済見通し」.

6) 긴급사태선언이 5월말까지 실시될 것이라고 가정한 경우임. 大和総研グループ(2020. 4. 8), 「緊急事態宣言・緊急経済対策後の日本経済見通し」.

7) NRI Journal(2020. 4. 8), 「木内登英の経済の潮流—「緊急事態宣言と緊急経済対策」」.

8) 관련소비는 외식·숙박, 오락·레저, 의류·신발 및 교통의 일부 등 포함.

<그림 2> 경제활동 자제·긴급사태선언에 의한 개인소비 하락



주: 긴급사태선언이 5월말까지 실시될 것으로 가정

자료: 大和総研グループ(2020. 4. 8), 「緊急事態宣言・緊急経済対策後の日本経済見通し」.

- 4월 7일 발표된 긴급경제대책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민간연구소는 GDP가 약 1%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NRI는 4월 7일 발표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기반으로 긴급경제대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분석, GDP가 +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함.<sup>9)</sup>
    - 추경예산 항목 중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총 4조 9,388억 엔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GDP를 0.9% 상승시킬 것으로 추산
  - 미쓰비시 종합연구소(社三菱総合研究所)는 2020년도 추경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번 긴급경제대책의 효과가 GDP를 +1.1%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sup>10)</sup>
  - 민간연구소들은 이번 대책은 경기부양보다 타격을 입은 기업·가계에 대한 구제 지원 등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감염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함.<sup>11)</sup>
- 한편, 일본정부는 4월 15일 개최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긴급대응책 1, 2, 3탄의 종합적인 경제효과가 실질GDP를 최대 2.7% 상승시킬 것으로 추산
  - 3차례 긴급경제대책의 경제효과에 작년 12월 발표한 「종합경제대책」의 경제효과(GDP의 1.1%)를 포함하면 총 GDP의 3.8%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함.<sup>12)</sup>
    - 일본정부는 2월 13일 긴급경제대책 1탄, 3월 10일 긴급경제대책 2탄을 각각 발표했음.

9) 이번 긴급경제대책은 2019년 12월 발표한 「종합경제대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연구소는 2020년도 추경예산을 기반으로 신규 경제효과를 추정·분석하고 있음. NRIコラム(2020. 4. 8), 「経済対策で重要なのは経済効果よりも企業、家計の支援」

10) 会社三菱総合研究所(2020. 4. 13), 「緊急事態宣言・緊急経済対策を受けた日本経済見通し改定値」.

11) NRIコラム(2020. 4. 8), 「経済対策で重要なのは経済効果よりも企業、家計の支援」; 三井住友DS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2020. 4. 9), 「政府の緊急事態宣言と緊急経済対策が日本株に与える影響」.

12) 経済財政諮問会議(2020. 4. 15),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の経済効果試算」.

### 3. 정부의 대응

- 긴급사태선언 이후 대상지역인 7개 도도부현에서 잇따라 휴업 요청 및 지원금 등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추가지정을 요청하고 있음.
  - 7개 도도부현 모두 4월 13~14일 사이 휴업 대상 시설 및 요청을 발표
  - 도쿄도는 4월 13일 정지를 요청하는 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으며, 4월 15일 휴업 지원금의 대상 및 조건 등을 발표<sup>13)</sup>
    - 「감염확대방지협력금」을 조성하여 4월 16일~5월 6일까지 21일간 매일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0만 엔(2점포 이상 소유 사업자는 100만 엔)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밝힘.
  - 가나가와현은 4월 14일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게 최대 30만 엔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발표
    - 1사업자 당 10만 엔을 지급하고, 현에 소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최대 20만 엔을 가산하여 지급
  - 그 외 후쿠오카현의 유쿠하시시(行橋市) 및 치바현의 이치카와시(市川市) 등도 휴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밝힘.
  - 교토부·교토시 및 아이치현은 4월 10일 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으로 추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
    - 아이치현의 경우 10일 현 자체적으로 긴급사태선언을 발표(5월 6일까지)
- 긴급경제대책 발표 이후 담당 정부부처에서 현금지급 수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 및 기준 등을 발표하고 있음.
  - 총무성은 4월 9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생활지원특별수당」의 지급기준을 단순화하여 발표
    - 4월 7일 긴급경제대책에서는 현금지급(1세대당 30만 엔)의 기준을 ① 세대주의 월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감소하여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했을 시 개인주민세가 비과세 수준까지 감소한 경우, 또는 ②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월소득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연소득 환산 시 개인주민세 비과세 수준의 2배 이하인 경우로 상정하였음.
    - 그러나 지자체별·직업별·가족 구성별로 개인주민세 비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차등이 발생하고 기준이 복잡하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sup>14)</sup>

13) 도쿄도는 '기본적으로 정지를 요청하는 시설(예: 카바레, 나이트클럽, 바, 댄스, 노래방 등), '시설의 종류에 따라 휴업을 요청하는 시설(예: 탁아소 등은 필요한 보육을 확보한 이후 적절한 협력 요청), '사회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예: 병원, 치과, 약국 및 식료품매장, 편의점 등 생활 필수 물자 판매 시설 등)'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휴업 대상 시설을 발표. 대상 리스트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 <https://www.bousai.metro.tokyo.lg.jp/1007617/1007679.html>.

14) 日本經濟新聞電子版(2020. 4. 10), 「家計向け給付基準、全国一律に 職業でも差をつけず-単身なら月収10万円案」.

- 이를 시정하고 신청·심사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 세대인원별 기준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세대주의 월소득이 감소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주민세 비과세 수준인 것으로 간주, 현금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수정(<표 1> 참고)
- 4월 14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세대주 외 가계를 지탱하는 세대원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발표<sup>15)</sup>
- 한편, 일본경제신문은 4월 16일 공명당(여당)에서 제안한 추가적인 현금 지급안(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 현금 급부)에 대해 아베총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발표<sup>16)</sup>

<표 1> 세대인원별 현금 지급 조건(세대당 30만 엔)

세대인원별 기준금액 \ 지급조건	세대주의 월소득이 감소하여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세대주의 월소득이 50% 이상 감소하여 기준금액의 2배 이하인 경우
단독세대	10만 엔	10만 엔×2(20만 엔)
2인 가구(부양가족 1인)	15만 엔	15만 엔×2(30만 엔)
3인 가구(부양가족 2인)	20만 엔	20만 엔×2(40만 엔)
4인 가구(부양가족 3인)	25만 엔	25만 엔×2(50만 엔)

주: 부양가족 1인 증가 시 기준금액 5만 엔 증가

자료: 総務省(2020. 4. 10), 「生活支援臨時給付金(仮称)事業の実施について」; SankeiBiz(2020. 4. 10), 「30万円の給付金 Q&A どうすればもらえるのか確認を」.

<표 2>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책

일시	내용
1월 24일	- 외무성은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을 두 번째로 강한 ‘레벨 3(여행 중지 권고)’으로 격상
1월 30일	- 내각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범정부 대책본부 설치(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
1월 31일	- 외무성은 중국 전역의 감염 위험 정보를 ‘레벨 2(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로 격상하고,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및 후베이성 발행 중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 거부를 발표
2월 1일	- 코로나19를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하여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를 시행 * 조치 시행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에게 입원을 권고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입원도 가능 * 2003년 사스, 2013년 H7N9형 조류독감, 2014년 메르스 등이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이 5번째 지정
2월 13일	- 정부 긴급대책 (제1탄) 발표(153억 엔 규모) * 긴급대책은 ① 귀국자에 대한 지원(30억 엔) ② 국내 감염 대책 강화(65억 엔) ③ 미즈기와 대책 강화(34억 엔) ④ 피해 산업에 대한 긴급 대응(6억 엔) ⑤ 국제 협력 강화 등(18억 엔)으로 구성 - 중국 저장성 온주시의 감염 위험 정보를 후베이성과 동일한 ‘레벨 3’으로 격상하고 저장성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해 입국 금지 시행
2월 25일	- 「코로나19 대책의 기본 방침」을 발표

15) 朝日新聞(2020. 4. 15), 「世帯主以外の減収も対象 30万円給付、政府が拡大方針」.

16) 日本経済新聞電子版(2020. 4. 16), 「危機感映す「一律10万円」 迫った与党、首相前向きに」.

일시	내용
2월 26일	- 2주 동안 대규모 이벤트의 중단 혹은 연기를 권고
2월 27일	- 전국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3월 2일~봄까지 임시 휴교 요청
3월 4일	- <신형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의 발표: 특별조치법의 대상으로 코로나 19를 추가
3월 5일	- 한국, 중국인의 일본 입국 시 2주간 강제격리조치 실시 결정(3월 9일자 발표)
3월 9일	-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 금지를 결정
3월 10일	- <b>정부 긴급대책(제2탄) 발표(약 2조엔 규모)</b> * ① 감염확대방지 및 의료제공체제의 정비(486억 엔), ② 학교의 임시휴업 및 이에 따른 대응(2,463억 엔), ③사업활동의 축소 및 고용 대응 (1,192억 엔), ④ 사태 변화에 대응한 긴급조치(168억 엔), ⑤ 금융조치(1.6조 엔) - '긴급사태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결정(13일에 가결) (총리가 지자체에 외출자제, 휴교 등의 요청/지시를 할 수 있는 법안) - 이벤트, 모임 등 개최 자제 요청(2월 26일)을 10일 연장
3월 16일	- 일본은행이 긴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고 <b>금융 완화 조치</b> 를 발표 * ETF·REIT 매입 확대, 금융기관에 최장 1년간 금리 0%로 대출하는 조치 신설, CP 및 회사채 매입 규모 확대 등 - 일본은행,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캐나다중앙은행, 영란은행, 스위스 중앙은행의 6개 중앙은행은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달러 스와프 라인 금리를 25bp 내리고 당초 1주일 단위였던 공급 기간 외 3개월 만기 오퍼레이션을 제공하기로 합의(미국시간 15일에 발표) - 외무성은 스위스의 티치노주, 이탈리아 북부의 3개 주 및 스페인 일부지역 및 아이슬란드를 '레벨 3' 지역으로 격상하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24개국을 '레벨 2'로, 영국 및 아일랜드를 '레벨 1(주의 환기)'로 지정
3월 18일	- <b>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추가적인 긴급 조치(「생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b> * ① 개인긴급소액자금(소득지원, 상한 20만 엔) ②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유예 ③ 국세·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④ 지방세 징수 유예 등 포함 - 외무성은 전 세계를 감염 위험 정보 '레벨 1'로 지정
3월 19일	- 정부·여당 및 일본은행은 4월에 발표할 예정인 긴급대책을 위한 논의를 시작
3월 22일	- 후생노동성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생활자금으로 최대 20만엔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출특례조치를 결정 - 외무성은 미국 전역을 감염 위험 정보 '레벨 2'로 격상, 불필요한 여행을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
3월 23일	- 외무성은 이란 전역 및 유럽 18개 국가를 '여행금지권고' 수준인 감염 위험 정보 '레벨 3'으로 격상 - 내각부 산하에 약 50인 규모의 '코로나19대책추진실'을 설치 * 후생노동성, 총무성 등에서도 합류하여 기존보다 약 2배의 규모로 코로나19에 대응할 방침.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대책본부를 설치할 경우, 이 추진실은 본부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할 예정
3월 24일	- <b>도쿄올림픽 1년 연기 결정</b> - 도쿄도지사가 도시 봉쇄 가능성을 언급 - 문부과학성이 '학교재개 가이드라인'을 책정 * ① 출석정지 및 차별방지, ② 원활한 학습 진행, ③ 학교재개 체크리스트, ④ 임시휴교 가이드라인 등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
3월 25일	- 미국발 일본 입국자도 3월 26일 0시부터 2주간 격리조치 실시 - 외무성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토록 권고 (전 세계를 여행 자제 대상으로 한 것은 최초임.)
3월 26일	- 1월 30일 설치한 코로나19 대책본부를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내각 산하 조직으로 변경 * 이에 따라 전국 도도부현에 현지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계획 - '고용조정조성금'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검토에 착수

일시	내용
3월 28일	-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전반적인 방침 등을 담은 「코로나19 대책의 기본적 대처방침(基本的対処方針)」을 발표
	- 아베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리먼 쇼크 시 재정 규모를 웃도는 규모의 경제 대책 및 이를 위한 20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하여 10일 즈음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
4월 1일	- 외무성은 한국, 미국, 중국 등 49개 지역을 입국거부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 (입국거부 대상 지역: 총 73개)
4월 7일	- 도쿄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대응하여 「기본적 대처 방침」을 개정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총액 108조 엔 규모)'를 발표 * ① 감염확대방지책과 의료제공체제의 정비 및 치료약의 개발(2.5조엔), ② 고용의 유지와 사업의 지속(80조엔), ③ 코로나 종식 후 경제활동의 회복(8.5조엔), ④ 강인한 경제구조의 구축(15.7조엔), ⑤ 향후 예비비(1.5조엔) 등
4월 9일	- 총무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당 30만 엔을 지급하는 「생활지원특별수당」의 지급기준을 전국 일률적으로 단순화하여 발표

자료: 각종 언론, 정부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